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정진승



올해 10월 11일부터 4일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IPCC) 총회가 개최된다. IPCC는 1988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서 전 세계의 과학, 경제, 정책수립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의 추세와 원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IPCC가 1990년 1차 보고서를 통하여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의 발생 증가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며 파급효과가 광범위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후 인류는 기후변화 방지를 21세기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IPCC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와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공로로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전 세계의 약 2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 개최 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4월까지 전례 없는 저온현상이 지속되어 양식업과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한여름인 지난 6월부터 8월 기간 중 평균 온도보다 1.3도가 높은 집중더위가 지속되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였고, 곳곳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가 예측한 20~60mm의 강수량보다 4배나 넘는 약 260mm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유럽,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폭염

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약 1500여명이 일시에 사망했으며 중국 간수성에서도 폭우로 인하여 약 13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그러나 같은 중국의 윈난성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가 간의 성공적 협의를 위한 돌파구를 제시하여야 한다. IPCC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1990년 이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1997년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1990

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개최된 덴마크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총회에서의 합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IPCC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규명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출간함으로써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예를 들면 IPCC가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2035년까지 히말라야 빙하가 소

멸될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는 IPCC 자체의 신뢰성 하락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현상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IPCC 총회에서는 비대하여 IPCC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IPCC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IPCC 총회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성공적인 IPCC 총회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기후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위한 녹색성장 모델을 전 세계에 과감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기도 하다.

인류를 기후재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IPCC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PEC 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광주·전남 현안예산 삭감 정치권 살려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와 전남도의 핵심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현안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먼저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설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구한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프라가 빌 문화콘텐츠기술연수원 설립비 42억원도 삭감돼 문화산업 활성화가 구호에 그치게 됐다.

전남도 역시 F1(포물러원) 그랑프리 대회 운영비 6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대회 운영비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대회는 사실상 도비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SOC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조9559억원 가운데 3684억원이 누락돼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국비 지원금이 1조3818억원으로 금년보다 1374억원(11%) 증가했으며 전남도 역시 7542억원(11%) 늘어난 6조 9804억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산업인프라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크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 F1대회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긴다거나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시설비 전액 삭감 등은 또다른 출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3.2%, 전남도는 11.5%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형편이다.

이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경우 내년도 대회는 사실상 도비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SOC 예산도 당초 요청했던 1조9559억원 가운데 3684억원이 누락돼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국비 지원금이 1조3818억원으로 금년보다 1374억원(11%) 증가했으며 전남

을 보듯 뻔하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임

부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지방을 죽이면서 얻는 세수 확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임부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가의 전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7%가 임부세액공제 폐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장이 필요 없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 가운데 임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부세액공제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투자 확대다.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 민사 따라서 임부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지방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기적이거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 누구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인가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부자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정부의 임부세액공제 폐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20여년 동안 설치해둔 '지방 보호 장치'를 하루 아침에 없애겠다는 발상으로, 지방과는 아예 공존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교해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세금 혜택마저 없어지면 어떤 기업이 이전하려 하겠는가.

특히 지방은 고용 없는 투자가 많다. 따라서 임부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지방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기적이거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부자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부자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부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 의료 칼럼

정진욱



9월이 시작되면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의 건조한 가을 날씨에 피부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 또한 촉진된다.

기온의 변화가 심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평소 건강이 아닌 사마도 피부가 땅기는 느낌이 들기 쉬우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피부의 건조함이 심해지면 거칠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심한 경우는 붉은 반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견디지 못해 긁기 시작하면 각질이 생기

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단순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한 피부는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즉시 보습제를 사용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또 오이 마사지, 수분팩 그리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피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손실을 유발시키는 때를 미는 행위나 샤워, 뜨거운 목욕, 사우나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안에 아토피 어린이가 있다면 실내습도는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피부 보습에 유의해야 한다.

### 가을 피부관리

는 건조감, 피부의 따가움, 붉게 달아오르는 수포, 염증 등으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가려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방치하면 피부의 수분보습 능력이 떨어지면서 피부 자체가 보호 기능을 상실해 적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예민한 피부로 바뀔 수도 있다.

또한, 건조한 가을에는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피지와 땀의 분비가 적어 피부의 수분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피부속 수분이 공기 증발하기 쉽고 건조한 피부는 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가 촉진된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의 건조한 피부는 눈 주위에 잔주름과 아래로 처지는 깊은 주름이 생기기 쉬울 뿐더러 한번 생긴 주름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기후와 피부 표피층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모든 상황이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는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덥지 않게 적정 온도의 유지와 함께 가습기를 사용하는 등 온

몸에 너무 꼭 끼는 옷을 입으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조급한 피부는 자극이 적은 비누를 사용하고 목욕 후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즉시 보습제를 사용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또 오이 마사지, 수분팩 그리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피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손실을 유발시키는 때를 미는 행위나 샤워, 뜨거운 목욕, 사우나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안에 아토피 어린이가 있다면 실내습도는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피부 보습에 유의해야 한다.

피지 때문에 발생하는 여드름성 피부도 가을이 되면서 심해질 수 있다. 가을철 여드름성 피부는 기름기는 많은 반면 수분이 부족해 당기는 느낌이 생기고 거칠어지기 쉽다. 얼굴이 땅긴다고 아무런 크림이나 사용하면 여드름이 심해지기 십상이다.

여드름성 피부에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 중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크림 타입보다는 로션 타입이나 스킨 타입이 좋다.

세안제도 세정작용이 너무 강한 것은 피하고, 피부의 노폐물이나 피지는 제거하면서도 피부는 땅기지 않게 하는 세안제를 면밀히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미지에 피부과 원장)

## 기고

김성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실현을 제창한 이후 요즘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나 '공정사회'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일 다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어,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혼란스러울 정도다. 집권당의 지도자들조차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추진도 하기 전에 공정사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된다.

공정사회를 한 마디로 가장 쉽게 정의하면 '부정이 없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다른 아닌 '정직과 청렴이 자리

가 부정적하면 명령을 해도 백성은 복종을 하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논어 子路편) ② 지도자가 정직을 좋아하면 복종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上好義 民莫敢不服, 논어 子路편) ③ 정치란 바로 정직이다. 지도자 자신이 정직한면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는가(政者正 子帥以正 孰敢不正, 논어 顏淵편) ④ 지도자가 부정한지 않으면 백성은 상을 준다고 해도 부정한지 않는다(政者正 子帥以正 孰敢不正, 논어 顏淵편)"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인이면서도 공직자로서 최고위직

### 공정사회와 솔선수범

잡은 사회'가 공정사회다. '기회균등'은 예시다. 공정사회 건설은 탁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이나 가지고 알기알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시급한 국가적 실천과제 일 뿐이다.

누가 누구에게 미를 과해도 아니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의 본질이 '나라를 바르게 만드는 것(政者正)'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공정사회 건설은 정치권을 포함 공직자의 고유의 몫이다.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이면서 공직자로서 국정을 총괄한 경험까지 있는 공자(孔子)의 가르침 중에서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교훈을 4가지만 인용해 보고자 한다.

공자는 "① 지도자가 정직하면 지도자의 명령이 없어도 복종하고, 지도자

가 부정적하면 명령을 해도 백성은 복종을 하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논어 子路편) ② 지도자가 정직을 좋아하면 복종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上好義 民莫敢不服, 논어 子路편) ③ 정치란 바로 정직이다. 지도자 자신이 정직한면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는가(政者正 子帥以正 孰敢不正, 논어 顏淵편) ④ 지도자가 부정한지 않으면 백성은 상을 준다고 해도 부정한지 않는다(政者正 子帥以正 孰敢不正, 논어 顏淵편)"라고 가르치고 있다.

정직권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정직하고 청렴하면 누가 부정을 할 것인가. 누가 지도자를 따르지 않겠는가. 민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산지사방으로 갈라져 있겠는가. 천안함이 피격당하여 46명의 군인이 전사했는데도 속 시원한 보복은커녕 국론통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생기기 않았을 것이다.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사건도 물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루속히 정직권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결연한 의지부터 보여주기를 바란다.

(전 공무원·경영학 박사)

### 포털 자동차 동호회 불법 물건 구매 삼가야

얼마 전 차량 정보와 레포즈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는 차량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동호회를 통해 부품별 교체시기부터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같은 정보를 얻고 정기모임에도 참석해 꽤 도움이 되는 동호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 한 회원이 차량 번호판에 약간의 장지만 달면 과속을 하더라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며 그걸 공동구매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회원이 일제히 그것 좋은 생각이라며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즉시 사자

며 다 같이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것 불법 물건 구입해서 달라고 이런 동호회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기본이 언짢았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거나 다른 차량과 다르게 보이려고 이런 장치를 하는 건 엄밀히 말해 자기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다.

자동차 동호회들이 건전한 주인라이버들의 친목회화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장치 구매나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건전한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유지호·목포시 축복동

## 無等鼓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가 흥미롭다. 샌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 때 첨단 산업 소재인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실재 없이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더니, 미국과의 환율전쟁에선 에둘러 가고 있다. '갈밭을 감추고 숨어서 힘을 기른다'라는 도광양희(韜光養晦)식 대응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중국은 아직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라며 예봉을 피하고 있다. 외교적인 노력도 다각화하고 있다.

원 총리는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ASEM 개최인 벨기에와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하며 중국의 절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11월에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유럽이 미국편을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행보다. 미국산 닭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숨겨진 칼을 내비치면서 "아직은 (미국에 대해 보복할) 때가 아니다"라는 노회한 외교전략이다.

외환시장에서 1달러를 사려면 6.7위안을 내면 된다. 8.3위안을 내야 했던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하지만, 미국은 20~40% 더 절상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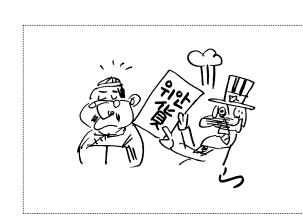
첫째, 중국이 환율유지를 위해 매일 2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액이 미국의 통화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둘째는 위안화 저평가 미국에 매월 4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환율전쟁의 불똥이 우리나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화가 덩달아 절상돼 수출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원화절상을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을 필요로 이 명, 11월에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유럽이 미국편을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행보다. 미국산 닭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숨겨진 칼을 내비치면서 "아직은 (미국에 대해 보복할) 때가 아니다"라는 노회한 외교전략이다.

/김주정 여론채무부장 jnews@

## 위안화 전쟁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